

‘사이버’ 공간 통한 北의 思想戰 對備 時急

- 北의 ‘先軍政治’ 찬양 등 利敵 행위 嚴斷 -

최근 서울경찰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제작한 포스터 등 선전물을 게재하는 등 북한의 ‘先軍政治’(모든 것에 軍이 우선한다는 정책)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前 전교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30문 30답」이라는 학생교육 참고 자료를 압수했는데, 이 문건에는 「김정일이 자신을 존경하도록 북한 주민을 세뇌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을 제시한 후 「한국도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세뇌시켜 왔다. 북한 교육만 세뇌라고 폄하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적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고에 가득한 재고 쌀을 일부

(북한에) 지원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군량미로 전용한다고 비판하는데, 군인은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적고 있으며, 「(북한의) 先軍政治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대한민국이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하지만, 논란이 많은 주장이고, 북위 38도 이남, 즉 남한에서의 합법정부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선군정치는 혁명적 지도자와 혁명적 당이 혁명군대를 앞세워 전체 인민을 혁명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로 무장하면 군

사강국 아닌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북한의 主敵은 미국이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밖에 없고, 남침 가능성 논리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수구반공세력의 국민세뇌 결과」라고 돼 있어 북한 체제를 교묘하게 정당화하고 찬양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현직교사가 친북 의식과 지침서를 소지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경찰을 비롯한公安

당국에서 더 조사해 봐야 밝혀지겠지만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 자주화’를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편향된 세뇌교육을 위한 자료라든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번영을 갈망하는 시점에서 우리 南·北(韓)만이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北韓은 끊임없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간첩을 남파하고, 국내 친북 좌익세력들을 이용하는가 하면 남한내 내부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적화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데 열을 올리는 등 인터넷에 걸들여져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내 친북 세력들까지 이들의 대남 공세에 가세해 이적행위를 일삼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다.

지난 해 8월에도 경찰은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친북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한국 민권연구소의 연구위원을 적발하는가 하면,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군정치의 이해〉라는 친북 서적을 팔고 있는 것을 수사에 나서기도 했고, 맥아더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한 우리민족연방제 통일추진회의의 강 모 공동의장을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그들이 부르짖는 공산 사회주의 체제가 진실로 인민들의 지상낙원이자 유토피아의 결정체라면 왜 그들의 국가경제가 송두리째 파탄나는 국제적 고립무원에 빠져 있고, 수많은 인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다 못해 목숨을 담보로 두만강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로 전전하고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生死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천신만고 끝에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1만여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말해 주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해 온 이 땅 한반도에 민족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의 그날이 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7천만 우리 한민족이 단일 민족의 정통성 아래 세계 역사의 주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한 자유 민주체제로의 통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계기로 北의 사이버공간을 통한 대남공략에 대비해 경찰을 비롯한公安기관에서는 그들을 능가할 수준의 대응기법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 역시 그들의 무차별 사상전 공세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정신무장을 새롭게 다질 때이다.

警·檢 수사권 논쟁, 합의점 도출 절실

— 허 경 미 박사(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지난 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양 기관이 상대방을 파소라고 몰아붙이는 광경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국회가 수사권 조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나서자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서로를 파소라고 비난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했었던 것이다. 정부의 두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니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서로가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경·검 간 가장 첨예한 논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의 개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찰은 검사와 같이 경찰도 수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검사와의 관계를 현행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15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거대경찰권을 탄생시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수사



아니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검찰 역시 인권침해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나 검찰,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주체로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우리의 현행 형사소송 구조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수사까지를 독점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이는 수사와 공소, 그리고 재판의 진행과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사소송절차를 검찰이 주도하는 것은 자칫 검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미 검찰 역시 자체적으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하여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는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사와 공소(公訴)는 불가분의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만약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을 범죄예방적인 역할을 주로 하는 행정경찰이 지휘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에게는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어느 국가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파소기관이라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검찰과의 상호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전체 형사사건의 97% 이상을 수사하면서도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경찰의 모습은 분명 모순이 있다.

2,500여명의 경찰대학 출신 간부의 진출과 신임 순경의 75% 이상이 대졸 출신인 점을 볼때 이들 나라보다 우리나라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시대 착오적이며 공감하기 어렵다. 설령 경찰자질을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을 공동의 수사주체로 인정하지 못할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1954년에 최초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때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의식,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위상과 오늘날의 그것은 분명 달라져 있다.

경찰과 검찰의 권력은 국가기관에게 부여한 것이니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고, 경제와 균형의 원칙하에 올해에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 더 이상의 논쟁은 본분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뿐이다.

3면 / 구홍일 경무회장, 전국 경무회 방문 시작



「평화집시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가 최근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전의경들과 함께 집회시위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이택순 청장이 진압장비를 착용한 채 방패로 쇠파이프를 막고 있다.)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로 2월중 국회 제출 예정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보호·보장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거쳐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울산 중구)을 비롯한 다수의 與·野 국회의원들이 이번 2월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평화적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 이 청원 법안은 복면시위를 금지하고, 법률 위반시 현행 집시법이 유형별로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벌금을 500만~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가 총이나 폭발물을 휴대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집회 주최자를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집회 주최측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평화적 집회·시위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주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보호해줄 의무, 유령 집회신고 금지, 도상집회에 대한 결정 권한을 경찰서별로 5~7명의 교수·변호사·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아직도 후진국 수준의 불법폭력 시위인가?

1. 이제 후진국형의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에 가까운 집단행동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진압경찰 투입반대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시위진압이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2. 지구상에 警察과 軍이 매 맞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을 향해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경찰은 바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3. 불법행동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합니다.

- 방패만 들고 불법폭력시위대에게 공격당해 쓰러지는 경찰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 최루가스 장비는 폭력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장비이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된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준법평화시위를 권장하고 적극 보호해 자발적 평화시위문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노사문화 정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5. 경제를 되살려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자.
- 「평화적인 시위문화정착」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